

데스크칼럼

고선주

문화체육부장



우연히 접했던 노벨상 수상자이자 미국의 경제학자인 러셀 로버츠의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은 여전히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지난 8월 이후 1년을 되새겨보는 시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그 어느 1년 간보다 물코스터 위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 2024년 10월 그것이 발표될 때는 시내 한 식당에서 시인들과 함께 술밥을 하고 있었고, 12월 그것이 발표될 때는 집에서 무료하게 TV 앞에 앉아 있었다.

전자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말하고, 후자는 아심한 한밤 중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친위쿠데타) 발표를 의미한다. 두 소식 모두 결은 달랐지만 충격 그 자체였다.

이 둘 사이는 교집합으로 연계돼 있는 듯하다. 노벨문학상의 직접적 계기가 5·18항쟁이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그의 수상작 ‘소년이 온다’는 5·18항쟁의 실재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출신 작가가 광주의 이야기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후대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소년이 온다’는 5·18항쟁의 숭고한 정신에 대한 ‘다시 읽기 버전’ 같아 전율이 일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상상해보지만 한강이 5·18항쟁이 예민한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고 해서 집필을 접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생각이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

든다.

노벨문학상 수상은 우리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결코 우리에게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만 믿어왔다. 지독히도 가난한 나라에 ‘무슨 노벨문학상’ 하며 기대 전에 스스로 견어 들어야 했던, 씹쓸한 기억들을 모두 지니고 있을 터다.

우리는 매년 뉴스에서 다른 나라 문학가들이 수상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구경꾼 일뿐이었다. 하지만 한국인이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거머쥔 사건은 1년여가 돼 가는 데도 믿을 수 없는, 일대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정말 믿기지 못할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2개월 후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되면서 정국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국민들은 모두 거리로 나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힘을 모아 투쟁을 해야만 했다. 다행히 당사자는 탄핵이 됐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의 부인 또한 여러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돼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라는 사태를 맞게 됐다.

5·18과 비상계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비극정에 자리하고 있다. 지역민들에게는 심각한 트라우마다. 5·18항쟁 때 겪었던 비상계엄을 다시 일깨운 것이다. 지난 겨울 지역민들 역시 탄핵과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거리에서 외쳤다. 평온한 일상을 뒤로 하고 투쟁에 나섰던 그 결심, 결심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를 출범시켰다. 여전히 내란세력들이 척결되지 못하고 있지만 불과 몇 개월전보다 삶이 훨씬 평화로워진 것은 사실이다. 단적으로 지난 3년여간 보지 못했던 뉴스를 맘껏 볼 수 있어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되고 있다.

모든 행복의 출발은 크든, 작은 결심이 필요하다. 결심

하지 않으면 어떠한 행동을 촉발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들과 마주한다. 한강이 ‘소년이 온다’를 쓸 결심이나 대통령이 자행한 비상계엄에 저항하겠다고 생각한 국민들의 결심이 없었으면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 등을 망라해 소소한 평온이 찾아왔을까. 다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감각이 무뎠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제 무수히 많은 일상에서 순간, 순간마다 발동됐을 그 결심들을 들여다보기를 희망한다.

필자 역시 쉬는 날을 중심으로 지난 겨울 거리를 누볐다. 그것 역시 큰 결심이 아니었다면 행동을 촉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로 낙인이 찍혔거나 올해 3월 대통령탄핵추진 긴급시국선언 때 한강 등 414명과 함께 했던 한솔성명 발표 때도 결이 비슷한 결심이 필요했다. 맘치멋졌 했다면 두고 두고 후회할 뻔 했다.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2년여 전 부친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사 바늘 하나도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딸 내미의 대학 문제 역시 쉽지 않은 결심이 필요한 순간 중 하나였다.

결심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할 일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이 사전적 의미지만, 결심을 내려야 하는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다른 행동이 촉발된다. 그런 만큼 모두가 옳다고 인정하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고 도출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이처럼 소소한 일상 속 곳곳에는 결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도사리고 있다. 나라든, 개인적이든 온전한 결심이 선 한 영향력으로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전남도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지만 전남의 열악한 문화인프라 현실은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에는 ‘지투사업’이라는 이름의 참 좋은 복지서비스가 있다.

정식 명칭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국가 바우처 제도의 한 형태이다. 쉽게 말해 도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면, 도가 이를 지원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권’ 제도이다.

어르신 운동처방, 판소리,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프로그램, 농촌체험, 안마서비스, 맞춤형 치매예방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마련돼 있어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사업임에도 아직 지투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는 도민이 많다. 주변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었어?” 하고 놀라는 분도 많다. 좋은 제도임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쉬울 때가 많다.

이에 ‘지투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지투사업은 도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농·어촌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도민 만족도가 높다. 현재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대상으로 27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한 예로, 섬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육지 나들이를 지원하는 ‘도·서·노·인 해피라이프’ 사업이 있다. 지난해에는 신안군 섬 지역 어르신 320여명이 생애 처음으로 워터파크를 방문해 큰 호응을 얻었다.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에 힘입어 올해 8월에는 여수·고흥·완도·진도·신안 등 5개 시·군, 400여명 이상의 어르신이 나주의 중흥 워터파크를 찾은 예정이다.

또 다문화 출생아가 많은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가정 아동 적응지원 서비스’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체험, 농어촌 노인 돌봄, 판소리 등 전남형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있다.

둘째, 지투사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사업으로, 전남에서는 매년 2만명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1300여명의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600여 곳에 달한다.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운동처방사, 돌봄전문가 등 유능한 전문 인력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내고장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는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표준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운영 품질을 관리하고,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자격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단기간성이 아닌 전문성을 갖춘 ‘지속 가능한 복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셋째, 지투사업은 도민이 참여해야 한다. 좋은 제도도

쓰레기 소각장 갈등…함께 사는 미덕 해법

취재수첩

임정호

지역사회부 부국장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두고 지역 주민과 행정당국 간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광주 광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삼거동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삼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예정이던 주민설명회가 무

산된 것은 고사하고 담당 공무원이 폭행당하는 ‘촌극’도 발생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너무 무책임하다. ‘그저 내 앞마당만 지키겠다’는 태도는 공동체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전국 광역시 중 소각장이 없는 도시는 광주가 유일하다.

1960~1970년대식 매립은 이미 한계다. 악취, 토양·지하수 오염뿐 아니라 부지 확보도 불가능하다. 여기에 생활쓰레기를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2030년 시행된다.

다만 주민들의 우려도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는 만

큼, 행정당국도 적절한 보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혹은 숙원사업 해결, 복지정책 등을 통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나아가 조례, 규칙 등 제도화도 추진해야 한다.

최신 소각장 기술은 과거와 달리 악취와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역 난방과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소각장이 주거지역과 공존하며 문화시설과 결합된 사례도 많다.

이런 사실을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주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아울러 모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편안함을 누리는 구조는 오래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래야 ‘쓰레기소각장, 두 팔 벌려 환영한다’는 말을 어귀에 플레카드가 걸릴 수 있다.

사설

전남 국립의대 설립, 국정과제 반영 환영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포함됐다. 적극 환영할 일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30여 년의 도민들의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최근 발표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공공의료 개선을 위한 국립의대 설립 추진이 반영됐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대학병원 기능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함께 설립해 지역 내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은 그동안 해마다 70만명의 일정 진료료 비롯해 1조5000억원 규모의 의료비 유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국 최하위 등 열악한 의료 현실에 직면해왔다. 전남 의대 신설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이번 국정과제 반영은 단순한 교육기관 신설을 넘어 전남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 지역 의료인력 양성, 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를 실현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지역 의료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대 설립을 전제로 한 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의대설립공동준비위원회를 운영해온 국립목포대와 순천대는 국정과제 반영을 환영했다.

전남도는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의 통합을 거쳐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통합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전남 국립의대를 개교하려면 조속한 예산 반영과 관계 부처와의 신속한 협의, 지역사회 및 의료계 의견 수렴을 포함한 투명한 절차 운영, 그리고 중장기 인력 확보 방안, 지역 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 계획에 맞춘 설립 로드맵과 지역 의료계·대학 연계 전략을 논의하고, 남은 기간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무 조율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도 통합대학 명칭 공모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합의지를 중앙정부에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시 전남 의대 신설 정원이 최우선 반영될 수 있다.

‘해조류산업·해양치유 1번지’ 완도

해조류산업과 함께 해양치유산업을 지역 먹거리산업으로 키워가고 있는 완도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전국 최초로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했다. 국비와 도비 등 총 354억원을 들여 신지 명사시리해수욕장 일원 1만6465㎡ 부지에 연면적 774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완공됐다.

해수·갯벌·해조류 등 지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해 환자의 회복과 일반인 건강증진 등을 위해 팔라소·명상·해수풀 3종의 풀장, 머드·바스·저주파·항기·스톤·음악·컬러·소리·해조류 거품 등 9종의 테라피를 포함해 다양한 해양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6월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부터 ‘데이터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2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누적 방문객이 8만8476명에 달할 정도로 완도군이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구간은 무엇보다 해조류산업 중심도시사라는 데 있다. 주수일원인 전복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역, 다시마, 김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는 해조류는 전남과 국내를 넘어 이미 국제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지난 6월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과 미국, 포르투갈 해조류 산업 관계자들이, 5월에도 세계은행(WB) 관계자와 케냐, 탄자니아, 세네갈, 모잠비크 등 13개 개발도상국 공무원이 방문해 완도 해조류 양식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완도군은 해조류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 구축을 위해 우량 종자와 신 품종 개발 등에도 매진하고 있다. 최근 김 우량종자 개발을 위해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종자연구소와 역량을 추진해 4개의 품종을 개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조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조류 블루카본 신규 인증, 해조류 활용 해양바이오산업 기반시설 구축, 해상 풍력과 수산업 공존 등 다양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무엇보다 완도군은 내년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2028년에는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도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완도군의 해조류산업 육성과 해양치유산업에 대한 노력이 ‘해조류산업·해양치유 1번지’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영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